

# 30일 전두환 심판의 날...광주가 달아오른다

### 천주교 정평위, 내일 성명서...오월단체·시민단체 등도 릴레이 성명서 내고 앞두고 엄정 처벌 촉구...“역사적 재판 생중계 해야” 목소리 높아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사안으로 꼽히는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가오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졌던 전두환씨에 대한 '심판의 날'로도 받아들여지면서 광주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도 사안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생중계가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엄정 재판 성명=22일 5·18단체들에 따르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씨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987년, 서울퍼런 5공 독재의 폭압 속에서 5·18 사건집을 처음으로 열며 전 국민들에게 5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5·18 40주년을 맞아 세계사에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꼽히는 5·18의 핵심 진상 규명의 하나인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는 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책임자의 마지막 재판일 수 있는 점 등을 성명서 답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의 유혈진압만을 막기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주한 미대사, 계엄군 책임자, 전두환까지 만나 설득했다. 교구 내부에서는 사제와 수도자, 가톨릭농민회와 가노정을 비롯한 평신도 역시 목숨을 무릅쓰고 시민과 함께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5·18 연루자로 구속, 수감된 이들의 석방과 희생자 추모, 진실규명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천주교가 목소리를 내는데 영향을 미쳤다.

조비오 신부는 1937년 광주에서 태어나 1969년 사제품을 받았다. 1980년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나서 시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2006년 사목생활에서 은퇴한 뒤에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2008년 고위 성직자 품위이자 교회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오월단체와 시민사회, “생중계해 5월 진실 알려야”=오월단체와 시민사회들도 전씨의 선고 재판(30일)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계획을 검토중이다.

5월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기념재단은 전씨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월단체들은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헬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전국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때 전두환·노태우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다. 또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 재판은 재판 내용 전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법정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전례가 없다는 법조계 시각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직접적 관련자인 점,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핵심적 진상 규명의 하나인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오월 단체들의 목소리다.

이미 오월단체 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선고 과정에서의 법정 촬영·영상 촬영을 허가해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월요일인 23일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전씨 재판에 대한 역사적 의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씨 재판 생중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 전체 생중계가 되지 않는다면 선고 전 법정 모습이라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사건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광주지법, 법원행정처 등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하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일 오후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근유치원 교사 등이 유치원 원생들이 그린 교통사고 예방 포스터를 안전전시회에 전시하고 있다. 이날 전시된 포스터는 선일유치원 원생들이 스스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렸다. /최현배 기자choi@

## 청연 메디컬그룹 법정관리 신청

### 병원장 3명도 일반회생 신청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추진, 관심을 끌었던 광주 청연 메디컬 그룹 관계자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그룹 계열 병원장 3명도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직원들만 9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자

인 청연홀딩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청연홀딩스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병원 경영컨설팅업체다.

또 청연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3일 같은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냈다. 청연인베스트먼트도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로,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A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다.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2016년 설립한 씨씨와이

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씨씨와이는 장성에 설립된 한의약품 제조·유통업체다.

법원은 이들 계열사들의 신청에 따라 최근 해당 법인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법원 뿐 아니라 청연한방병원 대표 원장들도 잇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인 A씨는 지난 12일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과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연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008년 3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의원으로 출발한 뒤 남구·북구에 한의원, 수완지구에 요양원·한방병원, 서구 재활요양병원, 순천 등에 계열사를 열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의욕만 앞선 검찰 기소·공소유지 미흡

회사로 납품한 물건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들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하고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의욕만 앞서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 수집 등에는 소홀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4)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公訴)기간이람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범행 일시·장소·범행동기·횡수 및 금액 등 범행 판단의 기초가 될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254조 4항)은 범죄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A씨 등을 기소하면서 ‘수습회 내지 수백 회에 걸쳐 함께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변호인들은 그러나 “방어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맞섰고 법원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검찰은 ‘130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했다’며 공소장을 변경,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적시한 범행 기간만 5년 5개월의 긴 기간임에도 대략적 횡령 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130회로만 기재한 점, 횡령금액 3억 원은 거액으로 130회로 나누면 1회당 230만원이 넘지만 개별적 횡령 금액·물품을 구별하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다른 공범들과 가담 시기가 다른데도, 횡령 횡수와 금액은 다른 공범들과 동일하게 책정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불법증축물 원상복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실형

2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화 판사는 허위 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추징금 2277만8000원도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린 원룸 건물에 원상 복구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